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일감 몰아주는 '슈퍼갑' 의혹

특정 11개 대형 업체 수주율 58%, 개별 감정평가 금액 1억 원 이상 홍기원 의원, "평가법인 추천 방식 개선으로 억울한 도민 없어야"

경기도 국경감사에서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도위)가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직권 선정하면서 평가법인들로부터 청탁 및 영업 등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평택갑지역)은 "경기도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거래하는 감정평가법인 48개 중 특정 상위 11개 업체가 58%의 감정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상위 업체의 경우 개별 감정평가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평가수수료도 높

다고 하며 경도위와 달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평가법인을 추천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법인 간 결탁 및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경기도가 소위 말 잘 듣는 감정평가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실제 계약은 시행사와 감정평가법인 간 이루어지지만 법인 추천은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 대상으로 청탁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감정평가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고 해도 담당 공무원의

지시가 있으면 다음 평가 수주를 위해 공무원이 요구하는 수용재결 증액 비용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슈퍼갑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든 경도위의 제도적 문제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법인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이 의심되는 특정 감정평가법인들은 홍 의원이 요구한 수수료 계약 내역 관련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관련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보상 금액을 재산정하는 등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해 운영된다.

1차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한 뒤 불복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결을 신청할 수 있다.

서인호기자
seoinho3262@kmaeil.com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2022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회대축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좌장을 맡은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전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지난 13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회대축제'의 일환이며, 탄전의 가치를 탐색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은 이재영 의원은 자연재해 시에 준비가 미흡하면 피해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판교동 오 피스텔 침수 영상과 탄전 피해 사진으로 주제 발표를 대신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의원은 8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지반이 약화된 경우 보행자 도로에서 3미터 이상 수심이 높아졌고 제방 높이와 1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탄전도 더 이상 재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하류인 수정구 태평동 지역은 성남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탄전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되어 탄전도 재난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성규 성남시청 생태환경과 과장은 유역면적, 위치, 자연지도도와 같은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하천 내 시설물 등에 대한 탄전의 현황을 언급했다.

이성규 과장은 "탄전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노후화된 시설 정비, 통행 시인 체감공간을 확대하고, 재해 및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경기도 관련 부서 검토 결과 기준 여유가 부족하여, 수목 및 하도 퇴적도 제거 등이 필요하다"며 "모래섬 내 잡목을 제거하는 등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하천 범람 최소화를 위한 퇴적도 준설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장석환 대전대학교 교수는 "상류와 하류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천 관리 시 상류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용인시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하천으로 들어오는 유량이 늘어나고 있어,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류에서부터 하천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 교수는 "탄전에 시민 산책로처럼 다양한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통수단면적이 줄어든 상황이라 하천 범람에 대한 원인 분석을 명확히 하고, 경제성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희에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둔치에 홍수터를 복원하여 투수 면적을 넓혀 투수율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탄전에 강변 완충을 위한 습지 조성을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사무국장은 시민이 함께 하는 관리체계 설립, 제도 정비를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전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권영한 신구대학교 식물원 원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탄전 둔치를 조성해 녹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권 원장은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피식물을 중심으로 식재를 조성하고, 늘어나는 정원 수요에 맞춰 계절별 식물을 달리하여 체계적이고 집약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재영 의원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 준비가 잘 되어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탄전도 토사 준설 등 관리에 대한 계획을 잘 만들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민수 국민의원 중앙당 혁신위원(전 분당을 당협위원장), 최준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수원7),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 이서영 경기도의원(안전행정위원회, 비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홍순모 부장이 내빈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형수기자
rtnews@kmaeil.com

강성삼 하남시의장, '지역화폐 챌린지' 동참 강 의장 "지역경제·소상공인 살리는 정부지원 계속돼야"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이 최근 '지역화폐 활성화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역화폐 챌린지'는 지난 8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견해나 주제를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성삼 의장은 '지역화폐 국비지원, 민생경제 심폐소생'이라는 주제로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하남시가 지난 2019년 4월 도입·발행한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는 도입 첫해 132억원의 발행액을 시작으로 2021년 12

월 기준 1천565억원으로 12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실제 지난해 발행액 대비 90%이상 사용되면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카드형 일반발행액이 인구수 대비 경기도 내 1위를 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남시가 실시한 지역화폐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정책에 만족한다(90%)', '하머니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78%)',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97%)'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화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삼 의장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있어 지역화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는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결국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지역경제 선순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지원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강성삼 의장은 다음 주자로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 JCI 하남시청년회의소 진용철 회장을 지명했다.

정영석기자
aysjung77@kmaeil.com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시작 의원별 전공 분야 살린 연구주제 돋보여

다양한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천시의회의는 내년에 활동할 총 17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을 최근 승인·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들에게는 시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연구단체는 소속 정당 및 상임위원회의 상관계 연구과제에 관심이 있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별 총 3개 단체까지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승인된 의원연구단체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달 4일 개최된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에서 연구과제 활동계획서 및 의견진술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내년 1년간 활동할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총 34명으로 전체 시의원(40명)의 85%를 차지하는 등 정책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다.

특히 연구과제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가 등록돼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이 연구·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3건, 문화복지위원회 5건, 산업경제위원회 4건, 건설교통위원회 4건, 교육위원회 1건 등이다.

앞으로 각 연구단체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 내년 11월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며, 이 연구 결과는 의원입법 등 의정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제9대 의회가 300만 시민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의원연구단체는 그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원연구단체의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들이 개발·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kjh6114@kmaeil.com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한우·젓소 경진대회 수상자 격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는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22년 경기도 한우·젓소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자들과 축산 농가를 격려했다.

'경기도 한우·젓소 경진대회'는 지난 1966년부터 시작해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경기도 가축개량을 이끌어온 전통 있는 행사이다.

올해 대회에는 한우 55개 농가 74두, 젓소 47개 농가 92두 총 102개 농가 166두가 출품됐다.

이후 중축 외모 심사 기준에 따른 부문별 심사를 진행해 도내 최고의 소 41두를 선정했으며, 이번 도 대회에서 입상한 한우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 출품,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자리

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 덕분"이라고 하며 "농업을 위한 농민기부소득을 축산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SF, AI 등 전염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축산환경에 대한 의무 강화 등으로 축산 농가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지만, 경기도 의회가 여러분 결사에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축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섭기자
kim5037@kmaeil.com

인천 남동구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구민 의견 수렴

인천시 남동구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 감사권의 하나로, 남동구의회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의회는 구민들로부터 다양한 제보와 의견을 접수받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전 접수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내용은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불합리한 관행 등이다.

접수 방법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직접 방문, 팩스 전송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제보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포함할 경우,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접수할 수 없다.

오용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남동구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감사인 만큼 구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남동구의회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임영희기자
dudghkda56@kmaeil.com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남양주시 오남읍 학교 운영 현황 청취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외협력과 과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학교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남양주시 순정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먼저, "오남초등학교와 양지초, 아람초 등 오남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학교 인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신호·과속위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들이 신속히 설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청의 신속한 조치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남읍의 학교 중 낙후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양오중학교는 유일하게 체육관과 강당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학생들

과 학부모들이 만족할만한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오남지역의 교육환경이 과거와 다르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역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써 보겠다"라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순정자 시의원은 "오남초등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남읍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라고 하며 "오남초등학교가 100년을 넘어 2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외협력과 황해경 과장은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며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양질의 학습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또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태민기자
choti0429@kmaeil.com